

2. 2013년 재정운영 방향

□ 재정여건

- 자주재원인 지방세(도세와 지방소비세)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년수준으로 예상되며,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(7.7%)로 인하여 다소 증가(497억원)*할 것으로 전망됨

- ▶ 지방세 ('13년) 5,530억원 ← ('12년) 5,530억원 / 변동 없음

- ▶ 보통교부세 ('13년) 6,200억원 ← ('12년) 5,703억원 / 증 497억원

* '12년 보통교부세 확정액(6,300억원)대비 100억원 감소

- 그러나, **세출수요**는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, 법정·의무적 경비, 동계올림픽 시설투자로 인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,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함에 따라 **세입·세출간 자원부족 심각**

- ▶ 인건비 증가 : 332억원(소방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45억원 포함, 인원증가 123명)

- ▶ 법정경비 증가 : 115억원(지방채상환 48, 채무부담 50, 지방선거부담금 17)

- ▶ 국고보조(일반국고+광특+국가기금) 도비부담 증가 : 308억원(2,621→2,929)

- ▶ 자체사업 추가(신규)수요 : 150억원* 이상

*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68, 전국기능경기대회 41, DMZ 60주년 기념행사 30

⇒ 따라서, 내년도는 재정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초긴축 재정운영 필요

□ 예산편성 방향

▶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

-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·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(감사원 지적사항)
-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시 세출 구조조정 의무화
-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유형별 재정악화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 위기관리 기능 강화
-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외부통제 강화

▶ **건전한 지방재정 운용**

- 모든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재검토하고,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
- 사업별 목적·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금지(감사원 지적사항)
- 선심·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·중복사업 통·폐합
- 행사·축제 예산은 「행사·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(’10.10.31, 행안부)」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,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
-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
- 청사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
-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등 지방채무 관리 강화
 - 채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단체는 계획 수립·이행 철저

▶ **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**

-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정책 적극 추진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
 -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,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
 - 마을기업 등을 통한 자전거 관련 일자리 창출

▶ **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**

- 창조적 R&D 투자,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

- R&D투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창조·융합·선도적 투자로 지원방향 전환
- FTA 등 개방에 대비한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농수축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

○ SOC·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 기틀 마련

- 지방공공 청사·시설 에너지 효율화 추진, 리모델링 등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
-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고 신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율성·안정성 제고 노력

▶ 자체재원 확충

○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및 징수기반 강화

- 국세대비 높은 수준인 지방세 비과세·감면 비율의 단계적 축소
-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,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

○ 세외수입 확충

- 체납액 징수 목표액 설정, 특별전담팀 운영 등 체납액 징수 강화
- 보통교부세 산정시 체납액 징수실적 반영 ('11년 부터)

□ 예산의 특징

- ▶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을 통해 건전재정운용 기틀마련
 - 최근 3년간 예산액에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절감율(10~20%)을 적용하여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한도액(1,464억원) 설정
 - 그 결과, '12년 당초 예산액(1,584억원)대비 7.6%(120억원) 절감하여 실국 자율편성예산 편성(기존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148억원 일몰)
 - ※ 국내여비 △467백만원('12년 8,375→'13년 7,908), 국외여비 △21백만원('12년 985→'13년 964)

 - ▶ 기존 대규모 자체사업에 대한 재검토 실시
 - 내년도 지방도 확·포장 사업은 '12년 당초(600억원)대비 17%(100억원) 감소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, 단계적으로 타시도 지방도 평균 투자액(400억원)수준까지 축소할 계획임

 - ▶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상향 조정
 - '2015년도 전국체전관련 공공체육시설(4개소*)에 대하여 도비부담 상향(20%→30%) 조정 : 도비부담 25억원 → 37억원 (증 12억원)
 - * 강릉 육상보조경기장, 종합운동장, 원주 소프트볼장, 동해 사격장
- 2012년도 도비부담 상향조정 실적 : 7개사업 26억원
 - 환경기초시설(5) 도비부담 상향조정 : 37억원 → 55억원 (증 18억원)
 - 장애연금수당(2) 도비부담 상향조정 : 17억원 → 25억원 (증 8억원)
-
- ▶ 지방채 발행은 내년도 지방채 원금상환(289억원) 범위내로 최소화 노력
 - 지방채 발행 : 285억원(동계올림픽 시설투자 135*, 지방도 확포장 150)
 - *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도비부담(287억원) 중 선투자(152억원)를 제외한 금액
 - ▶ 지방채 ('12년) 100억원 → ('13년) 285억원 / 증 185억원
 - ▶ 채무부담 ('12년) 400억원 → ('13년) 200억원 / 감 200억원